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하계 학술회의

지난 6월 16일 서울대 인문대학 7동 308호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하계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전임 러시아연구소장님 이선복 교수님과 전임 소장님이자 현 <러시아연구> 편집위원장님인 한정숙 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한 학술회의로서 기획되었다. 이에 학술회의의 첫 순서는 두 분의 전공인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고고학을 아우르는 중앙아시아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으로 기획되었고, 이어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별해볼 수 있는 대담회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콜로키움 “중앙아시아의 흥망과 소비에트”의 첫 발표는 “소비에트 해체 후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흥기 양상: 전통과 발명의 이중주”로 푸단대에서 중앙아시아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전문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원국 박사가 맡았다. 공원국 박사는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 고찰하면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은 기존의 이슬람 문화와 창조된 이슬람의 혼합체로서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초원 이슬람의 전통 위에 소비에트가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해력을 높이고 정부라는 개념을 만듦으로써 ‘high islam’으로 가는 길을 닦았고, 그 기반 위에서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과 함께 교육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도입되어 이슬람이 번성했다는 것이다.

2017년 정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세속 이슬람 문화라고 이야기되나 최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의 부흥 속도는 놀랍도록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북부 지방은 이슬람 문화가 가장 세속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표자는 이 키르기스스탄 북부 지방의 이슬람 문화를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중앙아



시아 지역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할리드와 블라코프의 논지를 소개하면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끼친다는 할리드의 의견에도, 체제 전복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블라코프의 의견에도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발표자는 정치적인 이슬람에 대한 위협은 과장되었지만 일상적인 이슬람의 힘은 강해지고 있으며, 그러나 전복적 힘까지 지니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자는 이슬람의 학생교육기관인 마드라사와 교육-기독교 기관으로서의 모스크가 포스트소비에

트 시기 중앙아시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마드라사와 모스크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비에트 시기의 물적-공간적 자원 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high Islam'의 바탕이 되는 기관이었고, 1990년대 '생존' 문제에 직면했던 중앙아시아에서는 아가칸 네트워크와 더불어 이슬람 교육기관이 구호-교육 활동을 진행해 정부 대신 주민들의 삶을 지켜나가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최아영 박사와의 토론에서는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특히 파미르 고원 지대의 지정학적-문화적 특징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의 두 번째 순서로 이광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의 발표, “소비에트 시기 민족공화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 발표자는 2015~2019년 기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 정도 및 해당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주권 침해 경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경향이 2월혁명 이후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일치성 및 현실주의-자유주의 논법의 전통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ССС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레닌과 스탈린의 갈등 하에, 1936~1977년 소련의 헌법에는 각 공화국의 자결권, 탈퇴권이 포함되었고 1917년 임시정부의 민족문제 인민위원회의 보장이라는 결정이 명문화·성문화되었는데, 이것이 1991년 소련 해체의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각 공화





국에 대한 간섭은 지속되었다. 발표자는 S. D. 크래스너(1999)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독립 공화국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조직화된 위선’으로 국제법적인 일반원칙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영토 통일성을 수시로 침해하는 현상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고가영 박사와의 토론에서는 소연방의 민족공화국에 대한 ‘Divide and Rule’ 정책이 서구의 식민지 정책과는 다른 균형발전, 경제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한 대담회에서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임경훈 교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신범식 교수, 서양사학과 노경덕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먼저 신범식 교수는 전쟁의 명칭부터 논쟁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일이지만 국제정치학자의 소견으로서 두 가지 주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국제정치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룰 수 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삼중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은 ‘global, regional, local’이라는 분석 수준의, 최소 세 차원의 충돌이 이뤄지는 전쟁이기에 입체적인 시야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즉 첫째, 러시아 대 서방이라는 국제적이고



지역적 차원, 둘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셋째, 돈바스 전쟁이라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사이의 전쟁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전쟁의 동시 진행으로 이해해야만 이 전쟁의 여러 국면과 목표를 이해하고 전쟁 종결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차원에서 ‘왜 서방이 러시아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자들은 적어도 트럼프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동의한다. 트럼프는 공세적 현실주의에 입각해 러시아 정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원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은 것은 물론 국제법상 옳지 않다. 그러나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슬라브 권역의



지역 정치를 끌어가는 데 있어 러시아의 영향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잘잘못을 판가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돈바스 전쟁 차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의 궤적을 보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기에 따라 노선을 놓고 갈등해왔다. 그런데 ‘순수한’ 우크라이나의 추구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기되었고, 러시아가 제시한 타협 구조를 우크라이나가 거절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러시아와 서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분리주의자 간의 전쟁이 톱니처럼 맞물리며 대리전의 양상까지 띠게 된 것이다.

이어서 **임경훈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측면만 보고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 신범식 교수에 동의했다. 당장 보이는 원인 이상으로, 적어도 냉전, 소련 해체 등과 같은 지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개별적 독립국이 된 것은 소련 해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표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탈공산주의 이행 중 한 부분인 민주주의 대 독재와 관련해서 고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권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 땅의 역사를 잠시 짚어야 한다고 임경훈 교수는 말하며, 푸틴이 주장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단일성(unity)의 역사적 근거가 21세에 주장하기엔 박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배경으로서 러시아와 서방 간 체제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1차대전과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명확한 주권체가 없었고, 이것도 서부와 동부, 불세비키에 대한 찬반에 따라 갈렸다. 탈공산주의 이행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혼란과 부패가 문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서방도 유럽에 더 가까워지려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우호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 발표자는 특히 독재 체제의 강화는 지리적으로 인접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심각해진다는 이론에 따라 러시아의 독재 체제 강화를 설명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쿠데타 없이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폭력보다 정보 조작을 통해 지지를 얻어 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자국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인 유럽, 미국의 입장과의 이해관계도 에너지 자원 등의 문제로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자는 예측하였다. 경제적인 블록화와 또 다른 정치체제에 따른 블록화 현상도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선전할 경우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노경덕 교수**는 본인의 스탈린 집권기 시대의 현존하는 공식문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식적인 발표와 실제 내부 사정이 판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공세적이고 이념적인 지향이 강한 스탈린의 연설문과는 대조적으로, 2차대전 전후와 냉전 무렵 소련의 외교적 행보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러시아의 전쟁 목적도 외부로부터의 민주화 요구, 정권 유지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이 전쟁이 푸틴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러시아가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는 즉시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고 발표자는 전망하였다.

는 러시아 측이 내세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민족적 통일성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12세기 초 블



# 러시아연구소 · 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라디미르 대공의 키예프 이주 이래,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짜르가 키예프 루스를 계승했다고 보았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몽골,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외국세력의 영향 속에도 자국은 코자크 집단을 중심으로 독자성을 지켜왔다는 의식이 강하다. 러시아의 동부 모스크바와 자민족이 별개라는 의식은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발표자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해 온 알타 회담 이후의 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깨졌음을 지적하고, 화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공 인정 및 사죄와 함께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2차대전 중 극우 민족주의자 반데라의 유대인과 소련군 학살에 대하여 반성할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들은 군사력, 정치력 측면에서 러시아가 더 유리하다 할지라도, 민족감정 등의 정서적 부분을 고려한다면 승전 여부와는 별개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소련 해체 전의 자국 중심 질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대면 학술회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여주었던 본 행사는,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구소련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지위 등,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깊은 담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에게 뜻깊은 학습과 사색의 시간이 되었다.

